

건강한 먹거리 제공 '전주푸드 효천점' 개장

시, 농가 소득 증대·친환경 특화매장 운영으로 탄소중립 실현... 새로운 농산물 유통허브 랜드마크 기대

전주시가 농가 소득과 시민 건강을 위해 만든 전주푸드 효천점이 21일 개장과 함께 문을 활짝 열었다.

이날 전주시 완산구 효천지구 내 전주푸드 효천점 2층에서 열린 개장식에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이미숙 전주시의회 부의장, 김춘진 한국농수산유류공사 사장, 김승섭 문화경제 위원장 등이 참석해 전주푸드 효천점의 성공을 기원했다.

전주푸드 효천점은 지난 2019년 푸드플랜패키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후 총사업비 44억여 원이 투입돼 지상 2층에 연면적 1271㎡ 규모로 건립됐다.

1층에는 농·축·수산물, 반찬, 제과, 웨이스트, 우리밀, 가공품, 사회적기업 코너가 들어섰다. 시는 제품 다양화를 위해 13개 시·군과 제휴푸드 협약을 통해 1차농산물과 가공품 등 1900여 개 품목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준비했다.

2층은 이음술 카페와 마을부엌, 커뮤니티 공간 등 지역주민들이 먹거리와



전주시 완산구 효천지구 내 전주푸드 효천점 2층에서 열린 개장식에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이미숙 전주시의회 부의장, 김춘진 한국농수산유류공사 사장, 김승섭 문화경제 위원장 등이 참석해 전주푸드 효천점의 성공을 기원했다.

제로웨이스트를 체험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소통과 만남의 공간으로 꾸몄다.

이로써 전주푸드 매장은 송천점과 종합경기장점을 포함해 총 3개로 늘어나게 됐다.

이날 효천점 개장으로 전주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농산물 유통허브 랜드마크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푸드 효천점 개장으로 지역 농가의 소득이 늘어

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으로 시민 건강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며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공급을 위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신뢰받는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우범기 후보 10억 상당 세종시 아파트 보유 시민 무시 행위"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 "전주에는 전셋집" 비판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우범기 후보의 10억 상당 세종시 아파트 보유 사실과 패배주의 발언에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선거 때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뜨내기들과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했다.

21일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전주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가 공무원특별공급으로 산 세종시의 아파트를 그대로 놔둔 채 전주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것은 전주시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는 언제든 세종시로 돌아가겠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는 대목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지도 않고 그대로 놔두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우범기 예비후보가 공무원특별공급으로 산 세종시 아파트는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현시세가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에 살면서 전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것은 전주시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우 예비후보의 세종시 아파트 보유 사실이 전해지면서 전주시장 출마에 대한 준비는 고사하고 전주시에 심심하게 속여 사과해야 한다는 후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김윤상 기자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세종시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고, 전세도 내주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라며 "언제라도 전주를 떠날 사람, 선거 때만 나타났다 사라지는 사람, 전주 시민을 선거 때만 이용하려 했던 뜨내기들과 다를 게 무엇인가"고 지적했다.

이어, 우범기 후보가 마치 전주에 대해서 뉘그러 다 아는 듯한 시각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전주 문제 중의 하나는 우리는 해도 안 된다'라는 패배주의, '전주는 지나치게 작은 꿈을 꿔다', '우물안 개구리'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전주 시민을 무시한 발언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전주는 패배주의에 빠진 적이 없음을 명확히 하며 이는 전주시, 전주시민에 대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우범기 예비후보의 행적과 발언은 전주 시민을 무시하는 행태로 전주 시장 후보로서 전주 시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지금이라도 선거철 뜨내기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상처받은 전주 시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1인가구 고립·고독사 예방 지원체계 강화

독거노인 중심 지원체계→생애주기별 종합지원체계 마련 추진

전주시가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독거노인 중심 지원 체계를 성별·연령별 지원 체계로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시는 전주지역 1인가구가 최근 3년 동안 20% 이상 증가하는 등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로 인한 1인가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런 계획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전주시 1인가구는 2017년 7만3788명에서 2020년 8만9038명으로 늘어났다. 3년 사이에 1만5300명(20.7%)가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전체가구 대비 1인가구 비율은 29%에서 32%로 3% 포인트 증가했다. 시가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나선 이유는 1인가구의 급증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단절과 가족해체로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시는 그동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전주안심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 독거노인에 초점을 맞춘 1인가구 대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연령대의 1인가구 급증

추세에 따라 독거노인 중심 지원체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독사 예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지원단을 꾸려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지원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상반기에는 1인가구를 대표하는 청년, 중장년, 여성 등으로 구성된 정책지원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성별, 연령별 생애주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정책의 방향성을 정하고 다양한 사업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도 제정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1인가구 및 고독사 관련 실태

조사를 벌여 가족해체와 지역사회 단절 등으로 고립된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태조사를 토대로 1인가구 현황과 복지욕구를 파악해 다양한 1인가구 지원정책을 발굴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단절위기에 있는 고위험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민선5기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선제적 조치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관련 조례 제정, 실태 조사를 통한 종합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1인가구가 적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전주시는 다음 달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의 불법주차와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와 충전방해 행위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

시는 전기자동차와 일반 자동차 차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말까지 과태료를 곧바로 부과하는 대신 홍보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는 △충전구역 및 전용 주차 구역에 내연기관 차량의 주차 △충전구역 주변 및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일일 충전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초과 후 계속 주차하는 행위 등이다. 모두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전구역선 또는 문자를 훼손하거나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에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윤상 기자

전기자동차 차주 또한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충전구역에 계속해서 주차하는 경우 충전방해 행위에 해당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자동차 및 전기화물차 보급 확대에 나서고 있으며,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3370대에 보조금을 지급했다.

올해는 220억 원 예산을 확보해 1200대 분량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24억 원을 투입해 공용주차장에 40기의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민선5기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이 있겠지만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면서 "기대먼저 저감 및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친환경 차량 확대 등 수송 부분의 변화가 필요하며, 친환경 차량 및 충전시설 보급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에코스ENC와 함께 '희망턱움' 주거 상향 보증금 지원

전북주거복지센터, 주거취약계층 대상 사업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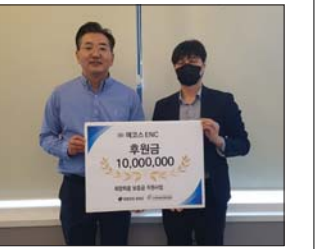
(사)전북주거복지센터(이하센터)가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 업체인 에코스ENC와 함께 희망턱움 주거 상향 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희망턱움 보증금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주거 위기로 보증금이 없어 주거를 구하기 어렵거나 경제적인 문제로 주거 상황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거복지센터는 최근 에코스ENC로부터 1000만 원의 기금을 후원받아 돈이 없어 주거 상황이 어려운 가구에 최대 3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일정 기간 보증금 분할 상환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증금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병섭 에코스ENC 대표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 계층을 위한 주거 상향사업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남수 전북주거복지센터 대표는 "열악한 경제여건으로 주거 사각지대에 놓여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전주 시민이 보증금 지원을 통해 주거 상황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며 앞



으로도 주거 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 상황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혁신·만성 지역 버스 노선 개편 주민 불편 초래"

전주시의회 송영진 의원

전주 혁신·만성 지역의 버스 노선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주시가 최근 개편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 후, 오히려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21일 전주시의회 송영진(혁신, 덕진, 팔복, 조촌, 여의동) 의원은 제3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주시의 버스 노선 개편 2개월이 지난 후, 혁신도시와 만성동 주민들은 변경 전보다 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개편안의 핵심인 간선버스는 10개 노선, 102대의 버스가 크게 6개축을 운행하는데, 이 노선에 혁신·만성 지역은 아예 빠져 있다"며 "민원 발생의 근본적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시는 간선버스를 신설하면서 혁신·만성 지역의 버스 노선도 변경했는데, 개편 전 9개 노선이 개편 후 8개로, 62대의 버스는 41대로 줄어 결과적으로 5개 노선 21대의 버스가 없

어졌다.

그는 "혁신·만성 지역에서 전주 도심까지는 여전히 대중교통으로 편리하게 갈 방법이 전무하다는 뜻이며, 환승 연결 역시 감차와 배차 간격 증가로 불편이 가중돼 해당 지역을 더욱 고립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는 이런 개편에 대해 혁신·만성 지역이 다른 곳보다 수요가 적어 간선 노선에서 제외했지만, 혁신도시시는 계획인구 3만명을 이미 채웠고 만성동까지 포함하면 인구 5만을 바라보는 곳을 버스 이용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결정인가"고 따져 물었다.

송 의원은 "발로만 혁신도시를 주창할 것이 아니라 버스와 보행만으로도 원활한 이동이 보장되도록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곧 있을 버스 노선 추가 개편 시 우선적으로 혁신·만성 지역 노선을 늘리고, 버스 회차지를 혁신도시에 두어 각 노선을 연계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국정원 전북지부 인근 주민 불편 해소대책 마련해야"

전주시의회 박형배 의원

국가정보원 전북지부 인근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1일 전주시의회 박형배(효자4·5동) 의원은 제3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국정원 전북지부는 국가 중요시설로 물리적 보안장치가 당연하지만 현실적으로 인구 주변 건물을 포함한 진·출입 구간이 전면적으로 통제되는 등 인근 주민의 고통이 말할 수 없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따르면 국정원 전북지부는 진입도로 입구가 통제되고 상가와 주변 건물의 국정원 방향 창문은 모두 폐쇄돼 있다. 또 인근 방파마을 주민의 농작물 재배를 위한 진입마저 어렵고, 황방산 등산로 이용 시민의 발길도 막고 있다. 부지 주변 300m 범위 지역에 자체 방호계획에 따라 철저히 통행이 제한되고 있어 현재로서는 관계 법령상 타당한 근거가 명확해 민원을 넣어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다."

후동에서 이전할 당시만 해도 현재 위치는 도심 외곽으로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효자동 인구증가, 사회기반시설 확대 등 시민의 생활터전과 밀접한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정원 전북지부는 약 3만3000㎡를 포함해 평지인 인근 약 19만㎡까지 광범위한 통제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제약 받고 있고, 인근 방파마을은 사유 재산권 행사의 제한은 물론, 갈수록 정주 생활환경이 나빠져 지역 발전의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주는 35사단과 교도소, 법원·검찰청, 항공대대 이전 등이 추진돼 왔으며, 국정원 전북지부 역시 이전 논의가 이뤄져 왔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며 "이제는 국가안보라는 명분 하나로 주민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민 간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힘 모은다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예비사회적기업·지역업체와 업무협약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혜선)가 21일 (주)나무풍경(대표 김준호), (주)더티콘(대표 임혜영), (주)대명(대표 최은서), (주)오핀(대표 정태진), (주)해움심리상담센터(센터장 안인숙) 등 전북예비사회적기업 및 지역업체 등 전북예비사회적기업 및 지역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위기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비사회적기업과 지역업체들이 분

별로 지원을 하자는 내용이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목공예, 바리스타 체험 등 현장전문가에게 배우는 직업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업체는 사진촬영 및 편집, 상담지원과 같은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전주시청소년안전망 1388청소년지원단은 총 117개 기관, 224명으로 구성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및 정서적 지원 △교육 및 취업 지원 △진로 및 취업 지원 △의료 및 건강 지원 △법률지원 △문화 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